

# 2021년도 경찰간부후보생(제70기) 공개경쟁선발시험

## 2 교 시

- 객 관 식 [분야별 필수] -

### 목 차

#### <과 목(1)>

【행 정 학】 (일반) .....	1
【형사소송법】 (세무회계, 사이버) .....	4

#### <과 목(2)>

【경찰학개론】 (일반) .....	11
【세 법 개 론】 (세무회계) .....	18
【정보보호론】 (사이버) .....	23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경 찰 대 학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행정이론과 학자 및 그 특성이 옳게 연결된 것은?

- ① 행정행태론 - 마리니(Marini), 정치행정일원론, 민주성 강조
- ② 행정관리론 - 어윅(Urwick), 정치행정일원론, 형평성 강조
- ③ 비교행정론 - 리그스(Riggs), 정치행정일원론, 합법성 강조
- ④ 신공공관리론 - 오스본(Osborne), 정치행정일원론, 성과 강조

2. 다음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굿노(F. Goodnow)는 행정은 국가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하였다.
- ② 윌슨(W. Wilson)은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 ③ 사이먼(H. Simon)은 고전적 조직원리들을 검증되지 않은 속담이나 격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 ④ 테일러(F. Taylor)는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를 통해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3. 과학적 관리법(scientific management)의 기본 전제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과학적 분석에 따라 유일무이한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다.
- ② 생산성 향상의 혜택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돌아간다.
- ③ 인간은 내재적 보상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
- ④ 조직의 목표는 명확하다.

4. 다음 중 고전적 인간관계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호손실험(Hawthorne experiment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산성 향상에 비공식적 집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② 생산성 향상은 작업환경의 변화보다도 근로자들이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 ③ 작업환경의 변화에 근로자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④ 이 실험은 애초에 생산성 향상보다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간적 대우가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5. 사회학적 신제도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직 내 제도의 변화는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 ② 합리적 조직행태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 ③ 제도를 법규에만 한정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 ④ 조직은 제도적 환경의 요구에 순응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주장한다.

6. 퍼트남(R. Putnam)이 제시한 사회자본론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제도적 성과와 관련하여 남부의 성공하지 못한 지역과 북부의 성공적인 지역을 비교 연구한 결과이다.
- ②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신뢰, 사회적 네트워크, 지역 금융이 있다.
- ③ 사회자본은 스스로 창출되면서도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되고 나면 짧은 기간 내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 성격을 지닌다.
- ④ 사회자본이란 참여자들이 공동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을 의미한다.

7. 정책수단의 한 형태인 바우처(voucher)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위한 방식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 ②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결탁 또는 바우처 전매 등으로 정책효과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소수의 공급자가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④ 저소득층에게 식품, 교육 등의 복지제공을 위해 종종 사용된다.

8. 다음은 정부를 논의할 때 거론되는 다양한 설명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제한된 공공재화를 배분하거나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는 인·허가 권한을 내주는 상황에서 형성된 배타적 이익을 지대(rent)라고 한다.
- ②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에서는 공무원의 규모는 업무량에 상관없이 증가한다고 주장된다.
- ③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자유를 공익을 위해 제한하자는 사상이다.
- ④ 공유재의 비극이라는 주장에서는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인간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한다.

9.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급확대 정책으로 시작되었다.
- ② 비영리단체 형태의 조직만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 ③ 무급근로자로만 구성된 비영리단체라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는 매년 사회적 기업의 활동실태를 조사하고 고용 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0. 정책집행에 대한 하향식 접근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엘모어(Elmore)는 하향식 접근법을 후향식 접근(backward mapping)이라고 표현하였다.
- ②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근거하여야 한다.
- ④ 정책결정과 집행은 독자적인 영역으로 서로 구분된다.

11. 조직 내 사회적 압력으로 인하여 비판적인 사고가 억제되고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결국, 잘못된 의사결정에 도달되는 현상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① 공유재의 비극
- ② 집단사고
- ③ 님비(NIMBY)현상
- ④ 포획현상

12. 다음 중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비용에 비해 총편익이 큰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가정한다.
- ②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화폐적 단위로 표시하고 계량적인 환산을 한다.
- ③ 적절한 할인율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 ④ 투자한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순현재가치가 크게 평가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난다.

13. 다음은 로위(T. Lowi)의 분류에 따른 정책유형에 관한 예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배정책: 고속도로 건설
- ② 재분배정책: 저소득층의 소득안정 정책
- ③ 규제정책: 식품위생에 관한 정책
- ④ 구성정책: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 금융 지원 정책

14. 다음은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지문은 몇 개인가?

- 가. 사이먼(Simon)에 따르면, 인간의 합리성은 제한적이지만 정책결정자는 최선의 대안을 추구한다.
- 나. 윌다프스키(Wildavsky)에 따르면, 예산 결정은 과거의 지출 수준을 토대로 점증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 다.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에 따르면, 조직의 의사결정은 고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 라. 드로(Dror)의 최적모형에 따르면, 영감, 직관, 통찰력과 같은 초합리적 요소는 합리적 분석을 위해 배제되어야 한다.
- 마.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에 따르면, 의사결정의 질은 사전에 설정된 표준운영절차가 얼마나 정교한지에 의해 결정된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15.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노사정위원회는 어떤 정책조정방식이론을 따른 것인가?

- ① 엘리트론
- ② 다원주의론
- ③ 조합주의론
- ④ 계급이론

16. 허즈버그(F. Herzberg)가 주장하는 위생요인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무환경
- ② 임금
- ③ 동료 간의 관계
- ④ 책임감

17. 민츠버그(H. Mintzberg)가 제시한 조직구조의 기본 부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략부문(strategic apex)은 조직에 관한 전반적 책임을 지는 부분이다.
- ② 핵심운영부문(operating core)은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 ③ 중간부문(middle line)은 업무의 표준화를 추구한다.
- ④ 기술구조부문(technostructure)은 작업의 설계와 변경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다.

18. 베버(M. Weber)가 제시한 이념형 (ideal type) 관료제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서주의
- ② 전문성
- ③ 카리스마적 권위
- ④ 상명하복

19. 조직구조설계 유형에 관한 기술로 옳은 것은?

- ① 팀제 구조는 책임 및 권한의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 ② 기능구조는 규모의 경제라는 장점을 지닌다.
- ③ 사업구조는 환경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력이 기능구조에 비해 떨어진다.
- ④ 매트릭스 구조의 장점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있다.

20. 리더십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들러(Fiedler)의 상황론이 제시하는 상황변수에는 리더와 부하와의 관계, 리더의 공식적 권한, 과업구조의 특성이 있다.
- ②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과 같이 보상을 기반으로 추종자들을 통제하기 보다는, 평등·자유·정의 등 고차원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추종자들의 의식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려 한다.
- ③ 행태이론은 모든 상황에 효과적인 리더의 행태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 ④ 블레이크와 모튼(Blake and Mouton)의 관리망(managerial grid) 연구에서는 과업형이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 행태로 나타났다.

21.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99년 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 ② 인사와 예산에서 자율성은 확대되고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부여되는 정부기관이다.
- ③ 책임운영기관 제도설계의 이론적 기반은 신공공관리론이다.
- ④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22.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
- ② 국민권익위원회
- ③ 방송통신위원회
- ④ 금융위원회

23. 정보공개청구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제도이다.
- ② 예산 사용에 관한 정보는 이 제도를 통해 청구할 수 없다.
-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중앙과 지방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24. 다음은 정부에 대한 이론 중 주인-대리인 모델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주인이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주인이 대리인보다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 A )이라 한다. 그런 유리한 입장을 이용해 대리인의 ( B )가 발생하게 된다. 이 모형을 정부에 적용하면 우선 국민이 주인이고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대리인이다.

- ① A-정보의 비효율성, B-도덕적 해이
- ② A-정보의 비효율성, B-무임승차
- ③ A-정보의 비대칭성, B-도덕적 해이
- ④ A-정보의 비대칭성, B-무임승차

25. 다음 중 감사원의 임무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의 위법 또는 부당한 내용을 발견하면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에 대해서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
- ③ 직무감찰 대상은 공무원, 지방공무원, 한국은행 임원, 준공무원 등이다.
- ④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6. 다음은 직위분류제와 관련된 용어의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렬: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
- ② 직급: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 ③ 직위: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책무와 책임
- ④ 직군: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

27. 대표관료제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 ① 관료들이 그들의 출신, 배경집단이 아닌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공익에 봉사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 ② 대표관료제를 실현하기 위해 실적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③ 전문성과 능률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④ 대표관료제는 역차별과는 무관하다.

28. 조직생활에서 단정한 옷차림의 예의 바른 사람을 두고 선량하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예와 같이, 부분적인 특질을 전체적 수준으로 확대 해석하는 지각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오류를 지칭하는 용어는?

- ① 선택적 인지(selective perception)
- ② 후광효과(halo effect)
- ③ 자기 예언적 실현(self-fulfilling prophecy)
- ④ 투사(projection)

29. 다음은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지문은 몇 개인가?

- 가.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기회 균등으로 평등이념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나.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직업 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  
 다. 엽관주의는 선거를 통해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0. 다음은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적급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여 그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수를 우대하는 보수체계이다.
- ② 직무급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른 직무의 가치를 보수와 연결시킨 것이다.
- ③ 연공급은 근속연수, 경력 등 숙인적인 요소의 차이에 따라 보수의 격차를 두는 보수체계이다.
- ④ 생활급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내지 생계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중심으로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31. 계획예산제도(PPB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향식 예산편성으로 하위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된다.
- ② 비용편익분석 등 계량적 분석기법이 사용된다.
- ③ 의회와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해 실패한 제도로 평가된다.
- ④ 목표와 계획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집행에 초점을 맞춘다.

32. 다음은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 예산은 장, 관, 항, 세항, 목 등의 예산과목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에서 관 이상을 입법과목이라 한다.
- ②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지속되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회계연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 때 허용된다.
- ③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 경제정책상 조기 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등은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이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 ④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외국인 고용이나 건물 임차 또는 국공채 발행과 같이 다년도에 걸쳐 국고 부담을 야기하는 채무를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다.

33. 다음 중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금은 국가의 특정목적사업을 위해 출연금,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 ② 기금은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를 배제한다.
- ③ 일반회계예산의 집행절차는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
- ④ 일반회계예산은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급부를 원칙으로 한다.

34.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간목표가 아니라 사업이나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성과를 접근하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 ② 예산 집행의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집행이나 서비스 전달의 구체적인 수단을 탄력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
- ③ 사업선정의 기준과 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기관 간 비교가 곤란하고 그 결과 국가 전체 차원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 ④ 성과측정을 위해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와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지표가 포함될 가능성이 없다.

35.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정부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     )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① 수정예산                      ② 준예산
- ③ 가예산                        ④ 추가경정예산

36. 듀브닉과 롬젝(Dubnick and Romzek)의 행정책임성 유형 중 외부지향적이고 통제의 강도가 높은 책임성은?

- ① 정치적 책임성                      ② 법적 책임성
- ③ 전문가적 책임성                      ④ 관료적 책임성

37. 미국 클린턴 (B. Clinton) 행정부의 국정성과평가팀(National Performance Review)이 추구한 행정개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객우선주의                      ② 문서주의의 지양
- ③ 권한위임                              ④ 내부관리에 대한 통제 강화

38. 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과 자율적 책임성(Responsibil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율적 책임성은 정부가 행정활동으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추궁한다.
- ② 자율적 책임성은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반한 능동적인 책임성을 의미한다.
- ③ 제도적 책임성은 법규와 규정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강조한다.
- ④ 제도적 책임성은 수동적인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39. 특별지방행정기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책임 행정이 약해진다.
-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 범위가 넓을수록 이용자인 국민의 편의가 증진된다.
- ③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의 보완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설치한 일선 집행기관이다.

40. 다음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취득세                              ② 지방교육세
- ③ 재산세                              ④ 레저세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직권주의 소송 구조를 취하고 당사자주의 제도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사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원칙이지만 동시에 실체진실의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 ④ 검사조사실에 소환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포승과 수갑 사용을 정당화할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호교도관이 포승과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며, 무죄추정 원칙의 근본 취지에도 반한다.

2.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및 이와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 ② 토지관할의 기준 중 하나인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한다.
- ③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독판사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합의부에 이송해야 한다.
- ④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되는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다면 대법원이 직권상급 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3. 피내사자와 피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으므로 진정인 등은 내사사건의 종결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고, 아직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③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접견교통권은 인정된다.
- ④ 검사는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법원에 대하여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내사자를 대상으로 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범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이해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들을 동일한 한 명의 국선변호인이 모두 변론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② 변호인이 진범을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행위가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는 없다.
- ③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 ④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5. 소송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소송조건이 되지만, 고소가 있기 전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가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으로서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 ③ 친고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공소제기 전 고소를 취소한 후 고소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친고죄로 고소하여 공소제기된 경우, 수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사건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원래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경우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고 무죄의 실체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6.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불심검문을 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면 그 불심검문은 적법하다.
- ②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이 발생한 직후 그 인근에서 검문을 실시 중이던 경찰관들이 위 날치기 사건의 범인과 흡사한 인상 착의의 피의자를 발견하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하면서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을 때, 피의자가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경찰봉으로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진행을 제지하였다면 불심검문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 ③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경찰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 ④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7. 고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수개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저질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일부의 행위에 대해서만 고소가 있었다라도 그 고소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행위 전부에 미친다.
- ② 의사 甲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A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비친고죄인 명예훼손죄에 대한 A의 고소는 친고죄인 업무상 비밀누설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甲과 乙은 서로 짜고 주변 사람들에게 A를 모욕하는 말을 떠들고 다녔다. 이에 A는 甲과 乙을 친고죄인 모욕죄의 범죄 사실로 고소하였다. 甲과 乙이 모욕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제1심 공판심리 중 A가 甲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수소법원은 甲과 乙 모두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④ 친구 사이인 甲과 乙은 공모하여 甲의 부친 A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A의 고소에 따라 제1심 법원의 공판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A가 甲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경우, 수소법원은 甲과 乙 모두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8. 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②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 경찰관이 지문조사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그 피의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 ③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범인식별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기보다는,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케 하여야 한다.

9. 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피의자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 피의자가 마약투약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의자의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경찰관이 시위에 참가한 6명의 조합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후 경찰서로 연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다가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고 1시간이 지난 후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은 위법하다.
- ③ 피의자의 소란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경찰관 앞에서 소란을 피운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의자가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하다.
- ④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하고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위법하다.

10. 피의자 구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심문하여야 하나,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심문 여부를 결정한다.
- ②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 ③ 지방법원 판사가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경우에 이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 준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1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가 한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②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석방결정을 한 후, 그 결정서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되기 전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전격기소)할 경우 그 석방결정은 무효가 된다.
- ③ 구속적부심사절차와는 달리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는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을 할 수 없다.
- ④ 체포·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12.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시,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해외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저장매체에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의자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 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것은 적법하다.



- ② ○○평생교육원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원장은 현장에 없었고, 이사장도 수사관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건물 밖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등 영장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사관들이 영장의 제시 없이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은 적법하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회사에서 보관 중인 이메일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팩스로 영장사본을 송신하였다면, 집행 시에 그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적법하다.
- ④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13.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 이외에도 별도로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경찰관은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도록 하여 압수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이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해야 할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면 되고, 별도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 ④ 경찰관이 2020. 10. 5. 20:00 도로에서 마약류 거래를 하고 있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같은 날 20:24경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피의자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을 실시해서 작은 방 서랍장 등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10g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14.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기통신을 감청하기 위해서는 통신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청구하여 발부받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통신당사자가 가입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②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 ③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 보는 등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수사기관은 감청의 실시를 종료하면 감청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감청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로 인하여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5. 수사상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나.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청에 한하므로 피고인신문 및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 다. 지방법원판사는 증거보전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증거보전 청구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라. 검사가 증거보전청구를 한 경우 증거보전을 한 판사는 이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① 가,나      ② 가,다      ③ 나,다      ④ 다,라

16.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검사는 ‘죄가 안됨’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 ③ 검사가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

17. 재정신청에 관하여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 없이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나.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 다.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나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라.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① 가,나      ② 가,다      ③ 나,다,라      ④ 가,나,다,라

18. 공소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것만으로는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②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채 공소제기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나,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③ 공소제기 시에 변호인선임서,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 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다.

19. 공소사실의 특징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별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있어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 하였다’고 기재한 때에는 공소사실의 특징이 인정된다.
- 나.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어 ‘2020. 1. 28. 03:00경부터 05:2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라고 기재한 때에는 공소사실의 특징이 인정된다.
- 다. 마약류 범죄에 있어 ‘피고인은 2019. 11. 2.경부터 2020. 7. 2.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투약하였다’라고 기재한 때에는 공소사실의 특징이 인정된다.
- 라. 외국 유명대학의 박사학위기를 위조하여 행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위조문서의 내용, 행사일시, 장소, 행사방법 등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박사학위기 사본이 현출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특징이 인정된다.

- ① 가,나      ② 가,다      ③ 나,라      ④ 다,라

20.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 일부의 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 ②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처벌받게 되므로,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을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 ③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없지만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이는 임의적 공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대항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④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21. 형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배상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형사소송법」은 벌금의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 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③ 현행법은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로 확정된 사람이 미결구금이나 형의 집행으로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고 있으나 무죄로 확정된 피고인이 그 재판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 ④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 기간 내에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2. 형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령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할 경우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제1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되어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게 된 경우,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 ③ 구 「형법」상 위계간음죄(제304조)로 기소된 경우에 이 사건 심리 중 해당 조문의 혼인빙자간음죄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④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23.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및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법원은 증거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거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증거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이의신청이 허용된다.
- 나. 피고인은 증인신문과정에서 증거조사 내용에 맞추어 진술을 바꿀 수 있으므로 피고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 전에 하도록 「형사소송법」은 규정하고 있다.
- 다.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의 열람·등사를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 검사는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다.
- 라.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① 가,나      ② 가,라      ③ 나,다      ④ 다,라

24. 다음 중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가족·동거인·고용주에게 인정되는 권리로만 묶인 것은?

- 가. 변호인선임권      나. 체포·구속적부심청구권
- 다. 보석청구권      라. 구속취소청구권

- ① 가,나      ② 가,라      ③ 나,다      ④ 다,라



25. 다음은 「형사소송법」의 조문으로서 수소법원이 영장에 의해 피고인을 구속할 때 고지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8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① 제72조의 고지는 피고인 구속에 관한 사후 청문절차이다.
- ② 제88조의 고지는 피고인 구속에 관한 사전 청문절차이다.
- ③ 제88조의 고지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은 효력이 없다.
- ④ 제72조의 고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제72조에 따른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구속영장은 효력이 있다.

26. 다음의 [사례]는 甲이 저지른 X, Y, Z 범죄사실에 관한 처리 상황이다. [전제]는 이 [사례]에 대한 가정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甲은 X범죄사실(범행종료일 2015. 9. 21.)로 기소되어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2. 27. 확정되었다. 甲은 다시 Y범죄사실(범행종료일 2016. 1. 7.)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Y공소사실의 공판심리 중 검사는 甲의 Z범죄사실(범행종료일 2016. 4. 18.)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전제]  
 ㉠ X, Y, Z 범죄사실이 모두 포괄일죄인 영업범에 해당한다.  
 ㉡ X, Y, Z 범죄사실 모두를 포괄일죄인 하나의 상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① ㉠의 경우 Z범죄사실을 Y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다.
- ② ㉠의 경우 법원은 Y공소사실에 대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의 경우 만일 X범죄사실이 상습사기죄에 관한 것이라면 Z범죄사실을 Y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다.
- ④ ㉡의 경우 만일 X범죄사실이 단순사기죄에 관한 것이라면 법원은 Y공소사실에 대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7.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사업주가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행위자의 법정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면 그 사업주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 사업주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②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 ③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박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28.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호텔 투숙객 甲이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甲을 강제로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채뇨 요구를 하자 이에 甲이 응하여 소변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물인 소변검사시인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② 교도관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피고인의 승낙 없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경우, 그 비망록은 증거능력이 없다.
- ③ 검사가 甲을 긴급체포하여 조사 중, 甲의 친구인 변호사 A가 甲의 변호인이 되기 위하여 검사에게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검사가 변호인선임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못하게 한 상태에서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구속 수감되어 있던 A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29.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丙의 말을 들은 丁이 丙의 진술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甲의 살인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 증거이지만, 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 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A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된 피고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담당공무원에게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한 경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알선수재죄에서의 요증사실이므로 A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 ④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

30. 뇌물 수수자 甲과 뇌물 공여자 乙에 대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乙의 동창생 A를 참고인으로 불러 “乙이 ‘甲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내게 말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甲과 乙을 공동피고인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A는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그동안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던 乙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의 증언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면 A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② A에 대한 진술조서 중 ‘甲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부분은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乙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④ 소송절차가 분리되더라도 乙은 甲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31.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증거동의를 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②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는 한 전문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 31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 ④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32.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고,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②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 그 증거목록의 기재도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 ③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아니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한다.
- ④ 피고인이 공판조서에 대해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그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다른 절차적 위법이 없는 이상 증거로 할 수 있다.

33. 증명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에 그 중 어느 쪽을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 ②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 ③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으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 ④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4. 상소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소권회복청구는 그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 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이고,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준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5. 형사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는 물론 재항고도 할 수 없다.
- ③ 법원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 ④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36. 상소심의 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포괄외죄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다.
- ② 1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유죄부분은 상고심에 이전되어 심판 대상이 된다.
- ③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변경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징역 1년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어긋난다.

37.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나. 법원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또는 배제하기로 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은 있으나,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는 없다.
- 마.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 ① 가,다      ② 나,마      ③ 다,라      ④ 다,마

38. 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 판결
- ② 공소기각의 판결
- ③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
- 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약식명령

39. 형사특별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나.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다. 「경범죄 처벌법」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한 후 그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라.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마.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더라도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로 볼 수는 없다.

- ① 가,나      ② 다,라      ③ 가,마      ④ 다,마

40. 형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 방어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할 것이지만,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나. 국제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조세범 처벌법」의 범칙행위의 경우,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범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다. 공소제기의 효력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의 전부에 미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 일부의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라. 공소장변경으로 인해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원이 공판절차정지결정을 한 경우, 공판절차 정지기간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마.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석방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

- ① 가,라      ② 가,마      ③ 나,라      ④ 다,라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주)법은 ‘공공의 평온,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절박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 ② 1884년 프랑스의 자치경찰법전에 의하면 자치체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하였다.
- ③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인 위험방지에 한정된다는 사상이 법 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되어 경찰작용의 목적 축소에 기여하였다.
- ④ 띠톱판결은 행정(경찰)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다.

2. 경찰의 분류와 구분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구분 또는 경찰작용이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수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나.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라 분류된다.
- 다. 광의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의 목적·임무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며 이러한 경찰개념의 구분은 삼권분립 사상에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개념이다.
- 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경찰의 조직·인사·비용부담)에 따른 분류이다.
- 마.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위협의 정도 및 담당기관에 따른 구분이다.
- 바.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경찰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른 구분이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 경찰의 기본적 임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공공질서’는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결적 전제조건이 되는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로서 오늘날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 가능 분야는 확대되고 있다.
- 나. 오늘날 복지국가적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경찰행정 분야에서도 각 개인이 경찰권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과 관련이 있다.
- 다. 인간의 존엄·자유·명예·생명 등과 같은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적 가치나 무형의 권리에 대한 위험방지도 경찰의 임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인적 권리와 법익이 보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찰의 원조는 잠정적인 보호에 국한되어야 하고, 최종적인 권리구제는 법원(法院)에 의하여야 한다.
- 라.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불문규범이 성문화되어 가는 현상으로 인하여 오늘날 공공의 질서라는 개념은 그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 마. 위험은 경찰개입의 전제조건이나 위험이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의 통행이 거의 없는 밤 시간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등일 때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에도 통행한 운전자는 경찰책임자가 된다. 이는 공공의 안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을 침해함으로써 법질서의 불가침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 바.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단, 경찰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공공필요에 의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경찰의 기본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경찰의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분배, 경찰행정정보의 공개, 성과급제도 확대는 경찰의 민주성 확보방안이다.
- ② 인권존중주의는 비록 「경찰법」에서는 언급이 없으나, 「헌법」상 기본권 조항 등을 통하여 당연히 유추된다.
- ③ 경찰위원회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감사청구제도, 경찰책임의 확보 등은 경찰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내적 민주화 방안이다.
- ④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5.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공무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라.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마.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바.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사.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3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6. 경찰의 부패이론과 내부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구조원인설’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 윌슨 등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신임경찰들이 선배경찰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이다.
- ② ‘썩은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보다는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신임경찰 채용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③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필드버그가 주장한 이론으로 공짜 커피나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 엄청난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 ④ 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으로 적절한 도덕적 동기, 최후수단성, 성공 가능성, 중대성, 급박성 등이 있다.

7. 코헨(Cohen)과 필드버그(Feldberg)가 제시한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음 각 사례와 가장 관련 깊은 경찰활동의 기준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김순경은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하였다. - [공공의 신뢰]
- 나. 1주일간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A는 자신의 TV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던 중에 평소부터 사이가 좋지 않던 옆집의 B가 A의 TV를 몰래 훔쳐가 사용 중인 것을 창문너머로 확인하였다. 이때 A는 몽둥이를 들고 가서 직접 자기의 TV를 찾아오려다가 그만두고, 경찰에 신고하여 TV를 되찾았다. - [공공의 신뢰]
- 다. 박순경은 순찰 근무 중 달동네는 가려하지 않고 부자 동네인 구역으로만 순찰을 다니려고 하였다. - [공정한 접근]
- 라. 이순경은 어렸을 적 아버지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하였는데,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고 단정 지었다. -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 마. 최순경은 경찰입직 전 집에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경찰에 임용되어 절도범을 검거하자, 과거의 도둑맞은 경험이 생각나 피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하였다. -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 바.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한순경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공명심에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탈주범 검거에 실패하였다. - [협동]
- 사. 은행강도가 어린이를 인질로 잡고 차량도주를 하고 있다면 경찰은 주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추격(법집행)을 하여야 한다. - [생명과 재산의 안전확보]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8. 갑오개혁이전 조선시대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의금부는 고려의 순군만호부를 개칭한 것으로 왕명을 받들고 국사범이나 왕족관련 범죄, 사형죄 등 중요한 특별범죄를 담당하였다.
- 나. 포도청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적·독립된 경찰기관으로 도적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 다. 사헌부는 풍속경찰을 주관하고 민정을 살피어 정사(政事)에 반영하는 등 행정경찰 업무도 담당하였다.
- 라. 초기의 암행어사는 정보경찰 활동을 주로 수행했으며, 이후에는 지방관리에 대한 감찰이나 민생을 암암리에 조사하여 국왕에게 보고하는 등 주로 감독·감찰기관으로서의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 마. 형조(刑曹)는 법률, 형사처벌, 소송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 바. 관비인 ‘다모’는 여성범죄나 양반가의 수색 등을 담당하였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9. 한국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894년 6월 일본각의에서 한국경찰의 창설을 결정하여 내정 개혁의 방안으로서 조선에 경찰창설을 요구하였다. 이에 김홍집 내각은 「각아문관제」에서 경찰을 법무아문 소속으로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곧 경찰을 내무아문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 ② 구한말(舊韓末) 일본이 한국경찰권을 강탈해 가는 과정은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 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한국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③ 미군정시대에는 경찰의 이념에 민주적인 요소가 도입되면서 최초로 1947년 9인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경제경찰, 고등경찰 등의 사무가 강화되었다.
- ④ 일제강점기 헌병경찰은 첩보의 수집, 의병의 토벌 등에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의 조정, 집달리 업무, 국경세관 업무, 일본어의 보급, 부업의 장려 등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특히, 지방에서는 한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다.

10. 자랑스런 경찰의 표상에 대한 설명으로 그 인물과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차일혁 경무관 - 빨치산 토벌의 주역이며 구례 화엄사 등 문화재를 수호한 인물로 ‘보관문화훈장’을 수여받은 호국경찰의 영웅이자 인본경찰·인권경찰·문화경찰의 표상이다.
- ② 안병하 치안감 -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과격한 진압을 지시했던 군과 달리,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기타 학생은 연행할 것’ 등을 지시하고,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하였다.
- ③ 최규식 경무관, 정중수 경사 -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1.21 사태) 당시 종로경찰서 자하문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순국함으로써 청와대를 사수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 올린 호국경찰의 표상이다.
- ④ 안택결 총경 - 1980. 5. 18. 당시 목포경찰서장으로 재임하면서 안병하 국장의 방침에 따라 경찰총기 대부분을 군부대 등으로 사전에 이동시켰으며 자체 방호를 위해 가지고 있던 소량의 총기마저 격발할 수 없도록 방아쇠 문치를 모두 제거해 원천적으로 시민들과의 유혈충돌을 피하도록 조치하여 광주와 달리 목포에서는 사상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11. 경찰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경찰법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헌법, 법률 조약과 국제법규, 조리와 규칙은 성문법원이다.
- 나.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를 법규명령이라고 한다.
- 다. 조례와 규칙은 지방의회가 정한다.
- 라.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구조를 정한 기본법으로 행정의 조직이나 작용의 기본원칙을 정한 부분은 그 한도 내에서 경찰법의 법원이 된다.
- 마. 위임명령은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행정규칙이다.
- 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이나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하므로 법원성이 인정된다.
- 사. 조리는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날 법의 일반원칙은 성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법령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② 행정입법이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법규명령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 ③ 법규명령의 제정에는 헌법·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아 독자적인 행정입법 작용이 허용된다.
- ④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13.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지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될 수 있다.
- ② 훈령과 직무명령 모두 법령의 구체적 근거가 없어도 발할 수 있다.
- ③ 훈령은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기에 하급경찰관청의 법적 행위가 훈령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에도 위법이 아니며 행위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다.
- ④ 훈령의 실질적 요건으로는 훈령이 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할 것 등이 있다.

14. 「수사경찰 인사운용규칙」이 적용되는 수사경찰의 근무부서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사이버범죄 수사부서
- ②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과학수사부서
- ③ 경찰청 교통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교통사고 사범 수사부서
- ④ 경찰청 수사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유치장과 호송출장소

15. 경찰공무원 의무와 근거법령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법	· 거짓보고 및 직무유기금지 의무 · 지휘권남용금지 의무 · 제복착용 의무
②	국가공무원법	· 법령준수 의무 · 친절공정 의무 · 종교중립 의무
③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 근무시간 중 음주금지 의무 · 품위유지 의무(직무 내외 불문) · 민사분쟁에 부당개입금지 의무
④	공직자윤리법	· 재산의 등록과 공개 의무 · 선물신고 의무 · 취업금지 의무(퇴직공직자 취업제한)

16.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하명이란 일반통치권에 기인하여 경찰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민에 대하여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 의무의 일체를 명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하며 경찰관의 수신호나 교통신호등의 신호도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경찰하명에 해당한다.
- ② 부작위 하명의 유형으로는 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가 있으며,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판매 금지는 절대적 금지이고, 유흥업소의 영업금지는 상대적 금지에 해당한다.

- ③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하명·허가·면제 등)와 형성적 행정행위(특허·인가·대리)로 구분할 수 있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④ 경찰하명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을 경우는 당해 영업에 대한 거래 행위의 효력이 부인된다.

17. 경찰허가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 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를 부관이라고 한다.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정부관의 경우 처분의 효과제한이 직접 법규에 의해서 부여 되는 부관으로서 이는 행정행위의 부관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부관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다.
- ② 부담은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이다. 즉, 하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하지만,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행정쟁송 및 경찰강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부담과 정지조건의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부담으로 보아야 한다.
- ④ 수정부담은 새로운 의무를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신청한 것과는 다르게 행정행위의 내용을 정하는 부관을 말하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18. 경찰상 강제집행의 수단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 대집행의 절차는 계고 → 통지 → 비용의 징수 → 실행 순이다.
- ② 집행벌은 경찰벌과 병과해서 행할 수 없다.
- ③ 강제징수 절차는 독촉 → 체납처분(압류-매각-청산) → 체납 처분의 중지 → 결손처분 순으로 진행한다.
- ④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는 선행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는다.

19. 경찰법령상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경찰행정에 관하여 중요 사항들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 안전부에 경찰위원회를 둔다.  
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다. 경찰위원회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라. 치안행정협의회 회의는 매반기 1회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마.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나, 치안행정협의회 위원장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 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 ③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21.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가.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나. 피한정후견인  
 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사람  
 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후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후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사람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2.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근무성적 평정 시 제2평정(주관)요소들에 대한 평정은 수(20%), 우(40%), 양(30%), 가(10%)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 평정 예측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라. 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3개월이 지난 후부터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마. 근무성적 평정은 연 1회 실시하며, 근무성적 평정자는 3명으로 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3. 경찰예산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회에 제출된 경찰예산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며 종합심사가 끝난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확정된다.
- ③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예산을 배정한다.
- ④ 경찰청장은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감사원 감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4. 경찰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려고 한다. 법률과 판례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사 대표에게 서면으로 그 언론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사실적 주장이란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할 경우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
- ④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언론사는 언론보도가 진실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5. 경찰활동의 인권지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들로 옳은 것은?

- ① 「국가재정법」에 따라 경찰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인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경찰법」에 따라 인권보호와 관련된 국가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 ③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따라 경찰청장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치안 행정이 구현되도록 소정의 사항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정책과 관행을 개선 또는 시정할 수 있다.

26. 프로파일링(Profil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유형(type)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신원(identity)을 파악하는 것이다.
- ② 프로파일링은 범죄현장에는 범인의 성향이 반영된다는 것과 범인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지니고 있다.
- ③ 심리학적 프로파일링은 범행 위치 및 피해자의 거주지 등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계량화하여 범인이 생활하는 근거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 ④ 한국은 도시 간의 간격이 협소하고 거주지역 내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27. 문제지향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제지향경찰활동은 경찰활동이 단순한 범집행자의 역할에서 지역사회 범죄문제의 근원적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역할로 전환할 것을 추구한다.
- ②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SARA모형이 강조되며 이는 조사(Scanning) - 평가(Assessment) - 대응(Response) - 분석(Analysis)으로 진행되는 문제해결 단계를 제시한다.
- ③ 문제지향경찰활동에서는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들을 마련하면서 필요한 경우 경찰과 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대응전략들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 ④ 문제지향경찰활동은 종종 지역사회경찰활동과 병행되어 실시되곤 한다.

28. 범죄원인에 대한 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아노미이론은 Cohen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범죄는 정상적인 것이며 불가피한 사회적 행위’라는 입장에서 사회 규범의 붕괴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 나. 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유발의 4요소는 범죄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죄피해자, 범행의 기술이다.
- 다. 사회학습이론 중 Burgess & Akers의 차별적 강화이론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하고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범죄를 학습한다고 한다.
- 라. Hirschi는 범죄의 원인은 사회적인 유대가 약화되어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비행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통제의 결속을 애착, 전념, 기회, 참여라고 하였다.
- 마.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범죄자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를 행한다고 본다.
- 바. 일상생활 이론은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행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4가지 요소로 가치, 이동의 용이성, 가시성, 접근성을 들고 있다.
- 사. 범죄패턴 이론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범죄예방의 열쇠라고 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처벌특례 항목’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들로 묶인 것은? (판례에 의함)

- 가. 교차로 진입 직전에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면,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면 이는 특례법상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 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라도 이를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할 것은 아니다.
- 다.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을 함에 있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그 운전은 특례법에서 규정한 무면허운전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
- 라.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특례법 소정의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가.나.                      ② 가.다.                      ③ 나.다.                      ④ 나.라.

3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자연적 감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발각 위험을 증가시켜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이다. 종류로는 조명·조경·가시권 확대, 방범창 등이 있다.

- ② 영역성 강화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의 기회를 차단하는 원리이다. 종류로는 울타리·펜스의 설치, 청결유지 등이 있다.
- ③ 자연적 접근통제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한다는 원리이다. 종류로는 차단기, 통행로의 설계 등이 있다.
- ④ 유지관리는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이다. 종류로는 파손의 즉시 수리, 잠금장치, 조명·조경의 관리 등이 있다.

31. 다음은 「도로교통법」에서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내용들이다. 괄호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

- 가. ( ㉠ )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제외)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나. ( ㉡ )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다.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 ㉢ )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 라.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 ㉣ )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 ① 94                      ② 96                      ③ 98                      ④ 99

32.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는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절차로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할 때, 그 시험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한 경우
- ②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신의 집에 도착한 상태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에 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음주측정을 위해 인근 파출소까지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명백하게 거절하였음에도 위법하게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
- ③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
- ④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고인의 골절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음주측정 당시 통증으로 인하여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경우

33. 경호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경호란 경비와 호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호위란 피경호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행위이다.
- ② 자기 담당구역이 아닌 인근지역에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호원조의 원칙에 따라 확인·원조해야 한다.

- ③ 행사장 경호과정에서 비표확인이나 MD(금속탐지기) 설치 운영 등은 제3선 경계구역부터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 ④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권한대행 모두 경호처의 경호대상이다.

34.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상 관련자들에게 부여된 준수 사항들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경비원은 장비를 근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고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 한도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35. 정보경찰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첩보와 정보는 구분되며 첩보가 부정확한 견문이나 지식을 포함하는데 반해 정보는 가공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된 지식이다.
- ② 정보는 사용목적(대상)에 따라 소극정보와 적극정보로 구분되며 국가안전을 유지하는 경찰기능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소극정보라 한다.
- ③ 2019년 제정된 「정보경찰 활동규칙」에서는 정보활동의 범위를 범죄정보를 포함한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정보로 재편하였다.
- ④ 「정보경찰 활동규칙」에 따라 정보관이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모든 상황에서 신분을 밝히고 목적을 설명하여야 하며, 임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해산명령을 할 때 해산 사유가 법률 조항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금지 통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
- ③ 해산명령은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않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자진 해산을 명령한다’는 용어가 사용되거나 말로 해산명령임을 표시해야 한다.

- ④ 해산명령의 대상은 ‘집회 또는 시위’ 자체이므로 해산명령의 방법은 그 대상인 집회나 시위의 참가자들 전체 무리나 집단에 고지, 전달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②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38.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안관찰처분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본질,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에 있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이므로 형벌과 병과하여 선고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②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하며,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보다 유리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④ 보안관찰처분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9. 외사경찰활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사요원 관리규칙」상 외사요원이라 함은 외사기획, 외사정보, 외사수사, 해외주재, 그리고 국제협력업무를 취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 ② 「출입국관리법」상 수사기관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수사절차 등과 관련해 일정한 제약을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은 대한민국 영역안에 있는 미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그리고 그 가족으로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 ④ 「범죄수사규칙」상 경찰관은 외국인 관련범죄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중요한 범죄에 관하여는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40.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국제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과정 모두에서 상호주의 원칙과 조약우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나.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공조해야 한다.

다.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의 공조절차에서 공조요청 접수 및 요청국에 대한 공조 자료의 송부는 법무부장관이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라.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마.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시기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및 확정일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다.
- ②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일 및 확정일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다.
- ③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성립일 및 확정일은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이다.
- ④ 증여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상 납부의무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부과취소
- ② 결손처분
-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 ④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

3.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법의 해석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법정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 ③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②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시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 ③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송달(전자송달 아님)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면 이를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②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및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 ②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3천만원(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 ③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7. 「국세기본법」상 심사 및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 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심사청구 결과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경우 재조사 후 행한 행정청의 처분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불복할 수 있다.
- ③ 국세청장은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이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국세기본법」은 「행정소송법」에 불구하고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8.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 ③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으로 한다.
-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아님)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9. 「법인세법」상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의 계산상 적용되는 상각방법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허권: 정액법
- ② 기계장치(광업용 아님): 정률법
- ③ 차단형 폐기물매립시설: 생산량비례법
- ④ 개발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10. 「법인세법」상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인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 ②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④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11.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없다고 가정한다.)

- ①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②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③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비율이 합병법인의 합병전 발행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 ④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님)

12.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 ② 내국법인이 직원(임원은 제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 ③ 내국법인이 매출채권(대여금 및 기타 채권은 제외)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 ④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13.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격합병이 아닌 합병에 따라 취득한 자산: 해당 자산의 시가
- ②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영(0)원
- ③ 자산을 법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취득가액에 포함
- ④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14. 「법인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 ②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되,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 ④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5.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이 아닌 것은?

- ① 장식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의 미술품 취득가액(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계상)
- ②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③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 ④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

16.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② 상품(부동산을 제외) 판매의 손익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상품을 인도한 날로 한다.
- ③ 법인(중소기업)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④ 상품의 시용판매의 손익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그 상품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로 한다.

17. 다음 보기 중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 가.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라.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마.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대하여 해당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소득세법」이 비과세소득으로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소득)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
- ② (근로소득) 근로자가 사내급식으로 제공받는 월 15만원 상당의 식사 기타 음식물
- ③ (기타소득) 노벨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
- ④ (근로소득) 자녀의 학자금



19.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으로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를 따름)

- ①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더라도 연예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연예활동의 과정에서 얻은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② 법인이 그 주주 중 1인 소유의 주식 전부를 유상취득하여 그날로 그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취득한 소득은 항상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 ③ 횡령으로 취득한 소득은 항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④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항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0.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자소득금액 계산시에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
- ③ 선급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1.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당소득)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 ② (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과세기간 종료일
- ③ (근로소득) 법인 임원의 횡령 및 그 관련 매출누락 사실의 발각 결과 소득처분에 의한 당해 임원의 상여: 횡령, 매출누락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④ (이자소득)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지급일

22.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②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③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 ④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23. 「소득세법」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2일 이상의居所(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 ②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 ③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 받은 자만 납세의무를 진다.
- ④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4. 「소득세법」내용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③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등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④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5. 다음 중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몇 개인가?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다. 지상권  
 라.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6. 다음 보기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다.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마.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사.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제26조의 3)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7. 「부가가치세법」상 2020년 제1기 과세기간(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가. 2019년 12월 10일에 제품을 10,000,000원으로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2019년 12월 31일에 대가를 수령하였으나, 세금 계산서는 2020년 1월 5일에 발급하였고, 인도는 2020년 1월 10일에 하였다.  
 나. 2020년 3월 1일에 제품을 80,000,000원으로 할부판매하고 매월 말 4,000,000원씩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3, 4, 5월분 할부대금은 약정일에 회수되었으나, 6월분은 8월 5일에 회수하였다.  
 다. 2020년 3월 20일에 상가를 잔금지급시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당일에 계약금 10,000,000원을, 2020년 5월 20일에 중도금 40,000,000원을, 2020년 7월 20일에 잔금 5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대로 지급 및 인도되었다.

- ① 16,000,000원                      ② 22,000,000원
- ③ 26,000,000원                      ④ 76,000,000원

28.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법」상 김경철씨(출자임원이 아님)의 2020년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얼마인가?

가. 급여는 42,000,000원이고, 상여금은 10,000,000원이다.  
단, 상여금에는 2019년에 개최되었던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에 의해서 지급된 금액 4,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나. 사택(사용자가 소유하고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택) 제공 이익은 8,000,000원이고, 자녀의 학자금으로 받은 금액은 6,000,000원이다.

다. 현물식사는 제공받지 않았으며, 매월 200,000원의 식사대금을 수령하였다.

- ① 54,000,000원                      ② 55,200,000원  
③ 59,200,000원                      ④ 63,200,000원

29.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②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업조직을 갖추고 재화·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여야 한다.
- ③ 근로자는 인적 독립성이 없으므로 사업자가 될 수 없다.
- ④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물적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30.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용 자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 ② 사업자간에 상품 등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
- ③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④ 현물출자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된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택시운송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 ② 직매장반출 등 판매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아님)
- ③ 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 ④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32. 다음의 「부가가치세법」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사업자인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한다.
-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할 수 없다.

33. 「부가가치세법」중 영세율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②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③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중에서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외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④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34. 다음 각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토지  
다.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에 입장하게 하는 것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마. 미가공 옥수수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② 유증과 사인증여는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를 말한다.
- ④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36. 「국세징수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2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허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체납액은 체납처분비, 국세(가산세는 제외), 가산세의 순서로 징수한다.

37. 「국세징수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을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을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 ②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 ③ 세무공무원이 질권(質權)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8. 「국세징수법」상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 가. 제사에 필요한 물건  
나. 의료업에 필요한 기구  
다.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라. 사업에 필요한 기계  
마. 가축류의 사료  
바. 어업에 필요한 어선  
사.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급여금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9. 「지방세법」의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원시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② 취득세 납세의무자에는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포함된다.
- ③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취득세의 징수는 고지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40. 「지방세법」의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다음 중 정보보호의 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가용성(Availability)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객체의 자격이나 내용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성질이다.
- ② 기밀성(Confidentiality)은 정당한 사용자가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 또는 자원을 필요로 할 때 지체 없이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성질이다.
- ③ 무결성(Integrity)은 정보의 내용이 불법적으로 생성, 변경 또는 삭제되지 않도록 하는 성질이다.
- ④ 인증성(Authentication)은 행위나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증명하여 나중에 그런 행위나 사건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성질이다.

2. 다음 지문은 OECD의 개인정보보호 8원칙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청구권 보장
- 정보주체가 합리적 시간과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① 수집 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 ② 공개의 원칙(Openness Principle)
- ③ 안전성 확보의 원칙(Security Safeguard Principle)
- ④ 개인 참가의 원칙(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

3. 다음 지문에 주어진 암호문을 Caesar Cipher를 사용하여 복호화할 때 결과는?

다음은 SHIFT +3을 적용한 암호문이다.  
SROLFHORYH

- ① VULNERABLE                      ② VUROIKRUBK
- ③ POLICEBEST                      ④ POLICELOVE

4. 다음 지문에서 대칭키 방식의 암호화 알고리즘은 모두 몇 개인가?

가. ARIA            나. DES            다. DSA            라. ElGamal  
마. ECC            바. RSA            사. SEED

- ① 2 개                      ② 3 개                      ③ 4 개                      ④ 5 개

5. 송신자 A와 수신자 B가 Diffie-Hellman 키 분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동일한 비밀키를 분배받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분배받은 비밀키 값으로 옳은 것은?

$g^x \bmod p$  ( $p, g$ 는 값은 공개되어 있고,  $x$ 는 개인키)

송신자 A:  $p = 7, g = 3, x = 3$   
수신자 B:  $p = 7, g = 3, x = 2$

- ① 1                      ② 3                      ③ 5                      ④ 7

6. 다음 중 암호학적 해시 함수(hash function)가 갖추어야 할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의 길이의 메시지를 고정 길이의 해시값 출력으로 변환하여야 한다.
- ② 해시값 출력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입력 공간이 출력 공간보다 커야 한다.
- ③ 임의의 해시값 출력에 대한 입력 메시지를 구하는 것이 계산상 불가능해야 한다.

- ④ 같은 해시값 출력을 생성하는 임의의 2개의 입력값을 찾는 것이 계산상 불가능해야 한다.

7. 다음 중 국산 해시 암호 알고리즘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 ① SEED, HIGHT                      ② HAS-160, LSH
- ③ SHA-1, HAS-160                      ④ LSH, LEA

8. 다음 중 전자 서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은닉 서명은 문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문서에 대한 서명을 받는다.
- ② 부가형 서명은 서명 검증 과정에서 메시지를 추출할 수 없다.
- ③ 부인 방지 서명은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현된다.
- ④ 다중 서명 방식은 하나의 문서에 여러 명이 서명할 수 있다.

9. 정부가 추진하는 '5G+전략' 10대 핵심 산업과 가장 관련성이 없는 것은?

- ① 지능형 CCTV                      ② 미래형 드론
- ③ 정보보안                      ④ 나노 복제

10. 다음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보안 통제 기법은?

임의의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명시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보다 보호수준이 낮은 객체로 이동하는 것을 검사하여 부당한 데이터 전달을 제어하는 기술

- ① 접근 제어                      ② 흐름 제어
- ③ 추론 제어                      ④ 사후 추적

11. 다음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접근통제 모델은?

이 모델은 데이터의 기밀성을 희생하더라도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둔 최초의 수학적 모델이며, 무결성 레벨을 계층적으로 정의한다. 이 레벨은 조직에 따라, 다루는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모델에서 주체는 자신보다 낮은 무결성 수준의 데이터를 읽을 수 없다(단순 무결성 원칙). 주체는 자신보다 높은 무결성 수준에 있는 객체를 수정할 수 없다(스타 무결성 원칙).

- ① 벨 라파둘라 모델 (Bell Lapadula Model)
- ② 비바 모델 (Biba Model)
- ③ 래티스 모델 (Lattice Model)
- ④ 클라크 윌슨 모델 (Clark-Wilson Model)

12. 다음 지문은 사회공학을 기반으로 한 공격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사람들은 바빠서 사무실에 들어갈 때 누가 바짝 따라와 같이 들어가더라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핸드폰으로 통화시능을 하고, 미소를 지으며 문을 잡아 준다. 사무실에 들어가 빈자리를 찾아 AP를 연결하고 외부에 있는 (차량에 탄) 동료의 무선네트워크가 연결되면, 이를 통해 내부네트워크를 해킹할 수 있다.

- ① Phishing                      ② Pretexting                      ③ Tailgating                      ④ Vishing

13. 다음 중 리눅스에서 루트(root)가 자신이 소유한 /etc/inetd.conf 파일의 권한을 설정할 때 가장 옳은 것은?

- ① #chmod 400 /etc/inetd.conf                      ② #chmod 555 /etc/inetd.conf
- ③ #chmod 600 /etc/inetd.conf                      ④ #chmod 777 /etc/inetd.conf

14. 다음은 /etc/shadow 파일의 일부이다. 설명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pol\_admin!:15964:0:99999:7:0:11323:  
police:\$5\$C7n1nPnI\$a6nCwOTqrNR2oDulKirRZ:14684:0:99999:7::

- ① pol\_admin 계정은 패스워드 미설정 상태이다.
- ② police 계정은 SHA-256 해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 ③ police 계정은 salt와 패스워드로 암호화된 필드가 있다.
- ④ /etc/shadow 파일에 사용자 패스워드 최소 길이 필드가 있다.

15. 다음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메모리 보호 기법은?

함수 진입 시 스택에 리턴 주소와 프레임포인터 정보를 저장할 때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값(Canary)을 기록한다.

- ① ASLR (Address Space Layout Randomization)
- ② NX (No-eXecute)
- ③ SSP (Stack Smashing Protector)
- ④ Format String

16. 다음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보안 공격 기법은?

알고리즘의 약점을 찾기보다 연산시간 분석, 소비전력, 방출 전자기파, 소리 등을 통해 정보를 추출하는 공격이다.

- ① 부 채널 공격 (Side Channel Attack)
- ② 스펙터 (Spectre)
- ③ 멜트다운 (Meltdown)
- ④ 고스트다운 (Ghostdown)

17. 다음 중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정보보호 서비스인 SecaaS(Security as a Servic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안의 책임을 기업으로부터 보안 서비스 제공자로 이관하게 된다.
- ② 보안 서비스를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 ③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 모델 중에서 IaaS에 해당된다.
- ④ 접근 관리, 웹보안, 이메일 보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8.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시세가 급등할수록 보안 위협은 증가한다. 이때 해킹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에 커다란 손상이 발생하거나 소프트웨어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다. 이에 신규 기능이 추가된 최신 블록체인 노드를 이전 버전의 블록체인과 호환되지 않도록 업데이트시키는 기술은?

- ① Hard Fork                      ② Secure Fork  
③ Smart Fork                    ④ Soft Fork

19. 다음 중 TCP와 UD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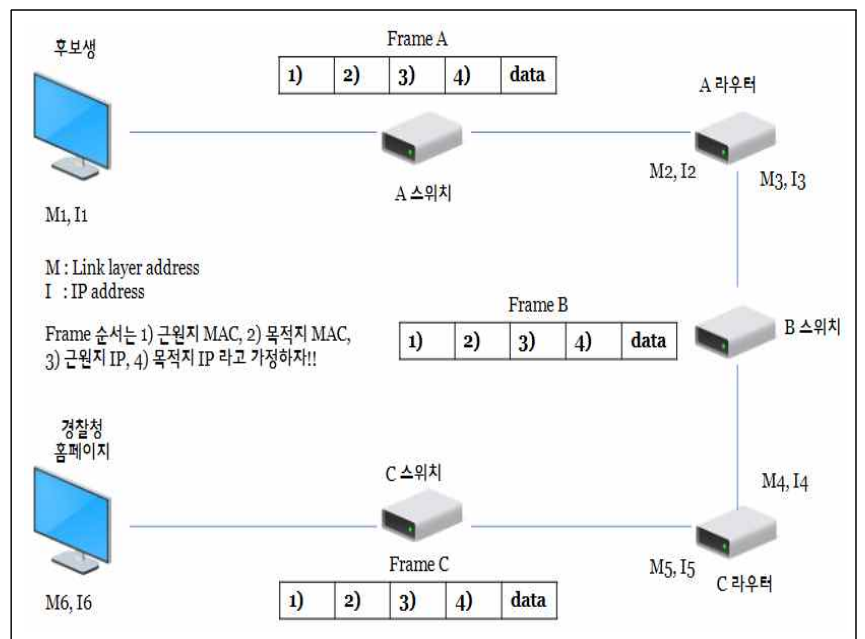
- ① TCP와 UDP는 전송 계층(Transport layer)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이다.
- ② TCP는 가상 회선 방식이며, UDP는 데이터그램 방식으로 동작한다.
- ③ TCP는 전송 순서를 보장하며, UDP에 비해 높은 신뢰성을 갖고 있다.
- ④ TCP는 연결 지향적이며, UDP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송 속도가 빠르다.

20. 다음 중 OSI 7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리 계층은 장치들 간의 물리적인 접속과 비트 정보를 다른 시스템에 전송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정의하며, 이 계층에서 다루는 데이터를 비트스트림(Bit Stream)이라고 한다.

- ② 데이터 링크 계층은 통신 경로상의 지점간(link-to-link) 회선 제어, 흐름 제어, 오류 제어를 담당하며, 이 계층에서 다루는 데이터를 프레임(Frame)라고 한다.
- ③ 네트워크 계층은 두 사용자 사이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종단간(end-to-end) 제어를 담당하며, 이 계층에서 다루는 데이터를 세그먼트(Segment)라고 한다.
- ④ 세션 계층은 두 응용프로그램 간의 연결설정, 이용 및 연결 해제 등 대화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를 제공하며, 이 계층에서 다루는 데이터를 메시지(Message)라고 한다.

21. 간부후보생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를 검색할 때, 후보생의 요청정보가 홈페이지 서버에 전달된다. 이때 각 스위치 구간(A, B, C 스위치)에서 해커가 볼 수 있는 프레임의 네트워크 정보를 맞게 설명한 것은? (단, 후보생이 경찰청 홈페이지로 요청하는 정보만을 가정한다.)



- ① A스위치: M1,M2,I1,I6 B스위치: M3,M4,I1,I6 C스위치: M5,M6,I1,I6  
 ② A스위치: M1,M2,I1,I2 B스위치: M3,M4,I3,I4 C스위치: M5,M6,I5,I6  
 ③ A스위치: M1,M3,I1,I6 B스위치: M3,M5,I1,I6 C스위치: M5,M6,I1,I6  
 ④ A스위치: M1,M3,I1,I2 B스위치: M3,M5,I3,I4 C스위치: M5,M6,I5,I6

22. 다음 중 인터넷 프로토콜과 그 용도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① CIDR : 혼잡 제어를 통해 신뢰성 있는 순차적 메시지 전송에 사용
- ② FTP : IP 주소를 물리적 네트워크 주소로 대응시키는 데 사용
- ③ ICMP : 호스트와 인접 라우터가 멀티캐스트 멤버십을 구성하는 데 사용
- ④ SNMP : IP 네트워크 상의 장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

23. 다음 중 ARP 스푸핑(Spoofing)을 이용한 스니핑(sniffing) 공격에 대한 대응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격자가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전송한다.
- ② ARP테이블을 동적으로 설정하여 융통성 있게 관리한다.
- ③ 주기적으로 무차별(promiscuous) 모드로 동작하는 기기가 있는지 검사한다.
- ④ 스위치 각 포트에 대해 접근 제한(Port Security)을 설정한다.

24. 다음 중 세션 하이재킹(Session Hijacking) 공격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기화 상태 탐지                      ② ACK Storm 탐지  
 ③ 데이터 압축화                        ④ MAC 주소 고정

25. 다음 중 취약점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nmap의 사용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nmap -sU -p 53 192.168.xxx.xxx : 192.168.xxx.xxx의 53번 포트에 대한 UDP 스캔을 수행한다.
  - ② nmap -sP 192.168.xxx.xxx : 192.168.xxx.xxx의 활성화 여부를 ping을 통해 검사한다.
  - ③ nmap -sR -p 1-4000 192.168.xxx.xxx : 192.168.xxx.xxx의 1번 포트부터 4000번 포트까지 RPC 포트를 검색하여 보여준다.
  - ④ nmap -sT -p 4000- 192.168.xxx.xxx : 192.168.xxx.xxx의 4000번 이하의 포트들에 대해 TCP Connect 스캔을 수행한다.
26. 다음 중 IPSe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IPSec 운영 모드 중 터널 모드는 종단 노드(end point) 구간에서 사용되며 전체 IP패킷을 보호하지 않는다.
  - ② AH(Authentication Header) 프로토콜은 발신지 호스트를 인증하고 IP패킷으로 전달되는 페이로드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 ③ ESP(Encapsulating Security Payload)는 발신지 인증, 무결성,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프로토콜이다.
  - ④ IPSec은 IP 계층의 보안을 위해 IETF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VPN 구현에 사용되고 있다.
27. 다음 중 PGP(Pretty Good Privacy)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안전한 전자 우편 송수신을 위해 Phil Zimmermann에 의해 제안되었다.
  - ② 제3자의 개입 없이 수신자에 대한 인증과 부인방지 기능을 제공한다.
  - ③ 하나의 파일을 여러 개의 파일로 분할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④ 별도의 인증기관은 필요 없으며, 키 링(Key ring)을 이용하여 공개키를 인증한다.
28. 다음 중 HTTP 프로토콜에서 요청 메시지에 적합한 인증 부족(Unauthorized)이라는 클라이언트 오류를 의미하는 상태 코드는?
- ① 200                      ② 301                      ③ 401                      ④ 503
29. 다음 중 SSL/TLS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SSL은 TLS 이전 버전이며, 현재 릴리즈 버전은 TLS 1.4이다.
  - ② HTTPS, SMTPS, FTPS는 TLS를 지원한다.
  - ③ TLS 통신은 대칭키와 비대칭키 암호를 사용한다.
  - ④ 브라우저 벤더들의 경우, 2020년까지 TLS 1.0/1.1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30.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유형 중, 입력값 검증 누락, 잘못된 검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레이스 컨디션(Race Condition)
  - ②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Cross Site Scripting)
  - ③ SQL 삽입(SQL Injection)
  - ④ 크로스 사이트 요청 위조(Cross Site Request Forgery)
31. 다음 중 전자 상거래를 위한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SET은 전자 지갑이라는 개념없이 간편한 전자 상거래를 지원한다.

- ② 인증기관(CA)은 참여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한다.
- ③ SET은 이중 서명(dual signature) 방식으로 은닉 서명을 지원한다.
- ④ SET은 대칭키 및 공개키 방식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모두 사용한다.

32. 다음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자 입찰 시스템의 요구사항은?

각 입찰 참여자 간의 공모를 방지하여야 하며, 입찰 공고자와 서버의 독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① 비밀성                      ② 무결성                      ③ 공평성                      ④ 안전성
33. 저장매체의 물리적인 공간과 실제 사용되는 논리적 공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낭비 공간을 의미한다. 디지털포렌식 관점에서는 공격자가 의도적으로 이 공간에 정보를 은닉할 수 있어 검사가 필요하다. 이 공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① 히든 공간 (Hidden Space)    ② 슬랙공간 (Slack Space)
  - ③ 깃 공간 (Git Space)              ④ 그레이 공간 (Gray Space)

34. 다음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의 원칙은?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통해 수집된 증거는 획득되고 난 뒤, 이송, 분석, 보관, 법정제출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증거를 전달하고 전달받은 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한 추적성이 명확하여 증거물의 진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 ① 전문배제성                      ② 독수독과성
  - ③ 연계보관성                      ④ 수집신속성
35. 다음 중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기준인 국제공통평가기준 (Common Criteri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EAL1에서 EAL7까지 7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② 우리나라는 CCP(Certificate Consuming Participants)로 분류된다.
  - ③ 정보보호 측면에서 정보보호 기능이 있는 IT 제품의 안전성을 보증·평가한다.
  - ④ 보안기능 요구사항과 보증 요구사항으로 구성된다.
36.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및 관련 시행령 제39조, 제40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순서대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방법>

- 대상: ( ㉠ ) 이상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 시
- 기관: 행정안전부, 전문기관 ( ㉡ )
- 시기: 지체없이
- 방법: 전화, 전자우편, 팩스
- 내용: 정보주체의 통지여부, 유출항목 및 규모, 유출시점과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 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 ㉢ ) 이상 게재

- ① ㉠ 1천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 7
- ② ㉠ 1천명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7
- ③ ㉠ 1만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 10
- ④ ㉠ 1만명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10



37.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8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 )의 아동에게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① 만 12세 미만                      ② 만 13세 미만
- ③ 만 14세 미만                      ④ 만 15세 미만

39. 다음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구현
- ② 정보보호 인증·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 ③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운영
- ④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40.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순서대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 ㉠ ) 이상이거나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 ㉡ )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① ㉠ 1000억원                      ㉡ 50만명
- ② ㉠ 1000억원                      ㉡ 100만명
- ③ ㉠ 1500억원                      ㉡ 50만명
- ④ ㉠ 1500억원                      ㉡ 100만명